중소벤처기업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(지 면) 2.3.(금) 조간 (인터넷) 2.2.(목) 12:00	-	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 장 임동우 (044-204-7350)
		담당자	사무관 임채식 (044-204-7354)

중소벤처기업부, 과도·불합리한 규제 신설·강화 사전 차단

- 중소기업·소상공인 규제예보제 시범 실시 -

□ 각 부처 신설·강화 예정 규제 중 중요한 규제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 피규제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내 강화

□ 대표 협·단체*와 함께 신설·강화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,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하여 과도·불합리한 규제도입 차단

* 중소기업중앙회, 벤처기업협회, 소상공인연합회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**신설·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**하고 **현장 의견이 반영**될 수 있도록 '**규제예보제**'를 도입, **3일부터 시범 운영**한다고 밝혔다.

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**규제 도입 단계**에서 이해당사자의 **의견수렴 창구를 마련**, 제출된 의견을 **분석·반영**하는 제도로써, **미국, 영국**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·운영되고 있다.

◈ 주요 국가의 규제예보제 도입현황

구분	미국 규제예보제 (Regulatory Alerts)	영국 소기업 검사(테스트) (Small firm Impact Test)	유럽연합(EU) 작은 것 먼저 원칙 (Think Small First Principle)
방식	규제 주요내용과 의견수렴 방법을 **누리집, 사회관계망 서비스(SNS)를 통해 쉬운 정보그림(인포그래픽)을 활용해 가공한 후** 제공(Quick-Facts)	규제개혁에 참여의사를 피력한 중소기업 **7000개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**해, 전자우편(이메일) 등을 통해 규제에 대한 의견 청취	**중소기업 대사(SME's envoy)**를 통해 **다수 기업의 의견 수집**을 지원, 규제 입법 전 산업단지 내 **사전 공청회 개최 의무화**

우선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·강화 시 작성·공개하는 **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**으로 **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(30억 원)** 이상이거나 **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**이 예상되는 규제를 선정하여

생업에 바쁜 중소기업·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**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하여 제공**하고 대표 **협·단체**(중기중앙회, 벤처기업협회, 소상공인연합회)와 함께 **의견을 수렴,** 주요 의견은 **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*에 반영**할 계획이다.

*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·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(법적근거 :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7조 제1항 및 제2항)

<규제예보제 시범운영 단계별 절차>

단계	예보대상 선정 & 시각화 (중소벤처기업부)	⇨	의견수렴 (관련 협단체)	⇨	의견제출 (중소벤처기업부→ 국조실, 소관부처)	⇨	결과 환류 (중소벤처기업부→ 관련 협단체, 기업)
시기	평가의뢰일 7일 이내		평가의뢰일 14일 이내		평가의뢰일 20일 이내		규제심사 완료 7일 이내

※ 규제 신설.강화 시 각 부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국조실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기 규제영향평가를 의뢰

1호 예보 대상으로는 배달료 인상 등 **소상공인의 비용부담**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**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** 및 **확인검사 의무화**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**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**」 일부개정안(환경부 고시)을 선정, 예보를 실시한다.

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'23년 하반기부터 **예보제 대상 확대**(정부입법→의원입법), **전용 시스템(규제예보시스템) 구축** 등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.

이영 장관은 "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**현업에 매진**하다 보면 **방대한 양의 규제영향평가서**를 확인하고 의견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"며,

"규제예보제를 통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**신설·강화 예정 규제를 최소한 모르고 지나는 일은 없도록** 하고,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"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규제예보제 홍보자료

참고 2 예보안건 정보그림(인포그래픽)